



---

#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

---



2019. 4.

#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

## 1 개요

- 4월 3일 개최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이 논의
  -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'99년 도입된 이후, 불필요한 사업을 걸러내는 등의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을 통해 재정효율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제도 도입 후 20년이 경과하면서, 경제·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
    - 평가방식 개편, 장기화된 예타 조사기간\* 단축, 예타 조사기관 다원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사업특성에 맞는 평가체계 마련
- \* 조사기간(개월) : ('09) 7.8 → ('12) 9.4 → ('15) 14.8 → ('17) 21.3

## 2 제도개편 방안

### ① 종합평가 비중 개편

- (현황) 모든 지역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중, 균형발전 필요성이 증가
  - 예타 종합평가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25~35% 적용
  -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부족, 지방 광역도시는 수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지역균형평가 감점 등 불이익
- (개선방안) 수도권·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 이원화 및 균형발전 평가 강화
  -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 적용하고 평가 가중치 조정
    - (비수도권) 균형발전평가 강화(+5%p), 경제성 축소(△5%p)
    - (수도권) 경제성(60~70%)과 정책성(30~40%)만으로 평가, 다만 수도권 중 ①접경·도서, ②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
  -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지 지역낙후도를 '가·감점제' → '가점제'로 운영

**< SOC사업 평가체계 개편 전·후 >**

구분	현행	개편안	
		비수도권	수도권
① 경제성	35 ~ 50%	30 ~ 45%	60 ~ 70%
② 정책성	25 ~ 40%	25 ~ 40%	30 ~ 40%
③ 지역균형	25 ~ 35%	30 ~ 40%	-

\* 균형발전 항목을 평가하지 않는 비SOC사업(정보화 등)의 평가항목 가중치는 현행 유지

□ (기대효과) 지역 특성별 맞춤평가로 지역 간 형평성 제고

**② 정책성 평가 내실화 :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**

□ (현황)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

○ 일자리, 환경,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대

- 현재 환경위험, 직접 고용효과만 평가 → 다양한 정책효과\* 분석에 한계

\* 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(생활여건, 환경, 안전 등 개선여부 등)

□ (개선방안)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정책성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분석

○ 정책효과 항목 신설, ①일자리, ②주민생활여건 영향, ③환경성, ④안전성을 평가

\* ① 직접 고용효과(현행) + 간접 고용효과 등, ② 공공서비스 접근성, 건강·생활불편 개선 등, ③ 부정적 환경영향(현행) + 수질·대기질 개선 등 긍정적 환경영향, ④ 재난·재해 대응 가능성, 안전사고 가능성, 정보보안 등

○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,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 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

○ 사업추진의지 및 준비정도 등은 예타대상사업 선정 단계에서 검토

○ 사업 주무부처가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한 후 예타 연구진의 검토·협의를 거쳐 종합평가에 반영

**< 정책성분석 평가항목 개편 전·후 >**

현행		개편안	
분류	세부 평가항목	분류	세부 평가항목
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	▷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▷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▷ 사업의 준비 정도	사업추진여건	▷ 관련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등 내부여건 ▷ 지역주민 사업수용성 등 외부여건
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	▷ 재원조달 가능성 ▷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문제	정책효과	▷ 일자리 효과 ▷ 생활여건 영향 ▷ 환경성 평가 ▷ 안전성 평가
고용효과	▷ 직접 고용유발효과 ▷ 고용의 질 개선효과	특수평가항목	▷ 재원조달 위험성 ▷ 문화재 가치 ▷ 기타 추가 평가항목
특수평가항목	▷ 추가 평가항목		

### ③ 복지·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 개편

□ (현황) 적부(시행·미시행)의 평가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

- 중기지출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복지·소득이전 사업은 예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,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예타 수요도 증가
- 복지사업에 기존 SOC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

□ (개선방안) 수혜계층·전달체계 개선 등 적극적 대안제시에 중점

- 경제사회 환경 분석, 사업설계의 적정성 등 평가항목별 점검방식으로 전환

< 복지사업 평가내용 개편 전·후 >

현행		개편안	
분류	세부 평가항목	분류	세부 평가항목
정책성분석	▷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여타사업과의 중복성 ▷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▷ 사업대상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▷ 전달체계의 명확성과 적절성	경제·사회 환경 분석	▷ 경제·사회 여건분석 ▷ 경제·사회 영향분석 ▷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
경제성분석	▷ 비용-효과분석	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	▷ 사업목표의 적절성 ▷ 수혜대상의 적절성 ▷ 추진방법의 적절성 ▷ 전달체계의 적절성
		비용-효과성 분석	▷ 기대효과의 적절성 ▷ 비용추정의 적절성 ▷ 비용대비 효과의 적절성

- 예타 결과는 각 항목별 대안제시에 중점

### ④ 종합평가 거버넌스 개편

□ (현황) 조사기관이 경제성분석·종합평가 일괄 수행

- 조사기관이 경제성분석 뿐만 아니라 정책성·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까지 수행,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
- 종합평가지 부처·지자체에 설명기회 부족

□ (개선방안) 경제성분석은 조사기관,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

-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,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
  - 재정사업평가위원회 : 예타 대상 선정, 예타 결과 등을 심의·의결
  - 분과위원회 : SOC, 사회문화산업, 복지·소득이전 분과위로 구성, 사업별 종합평가 시행
- 사업 주무부처가 주요 평가항목별로 사업효과 설명 → 조사기관의 검토의견 제시 → 토론 후 평가
- 각 분과위에서 논의된 종합평가 결과는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·의결

⑤ 예타 조사기관 다원화

□ (현황) 예타 조사를 단일 기관이 수행

- SOC, 건축 등 비R&D사업은 KDI(한국개발연구원), R&D사업은 KISTEP(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)이 수행 중
- 최근 SOC 이외 복지·문화 등 다양한 분야 예타 수요 증가

□ (개선방안) 예타 조사기관 추가 지정

- 비R&D사업(토목, 건축, 복지 등 비정형 사업) 분야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서 조세재정연구원 추가 지정
- 추가 지정된 전문기관은 복지 등 비정형사업 예타를 전담하되, 추후 SOC·건축 등의 분야도 KDI와 경쟁하여 수행

⑥ 예타 조사기간 단축

□ (현황) 예타 조사기간 장기화('09년 9개월 → '18년 19개월)

- 예타 조사기간은 장기화되는 추세로 '18년 평균 19개월 소요
- 부처·지자체 등은 예타 조사기간 장기화로 사업의 적기 추진에 어려움 제기

< 연도별 예타 수행기간 >

(단위 : 개월, 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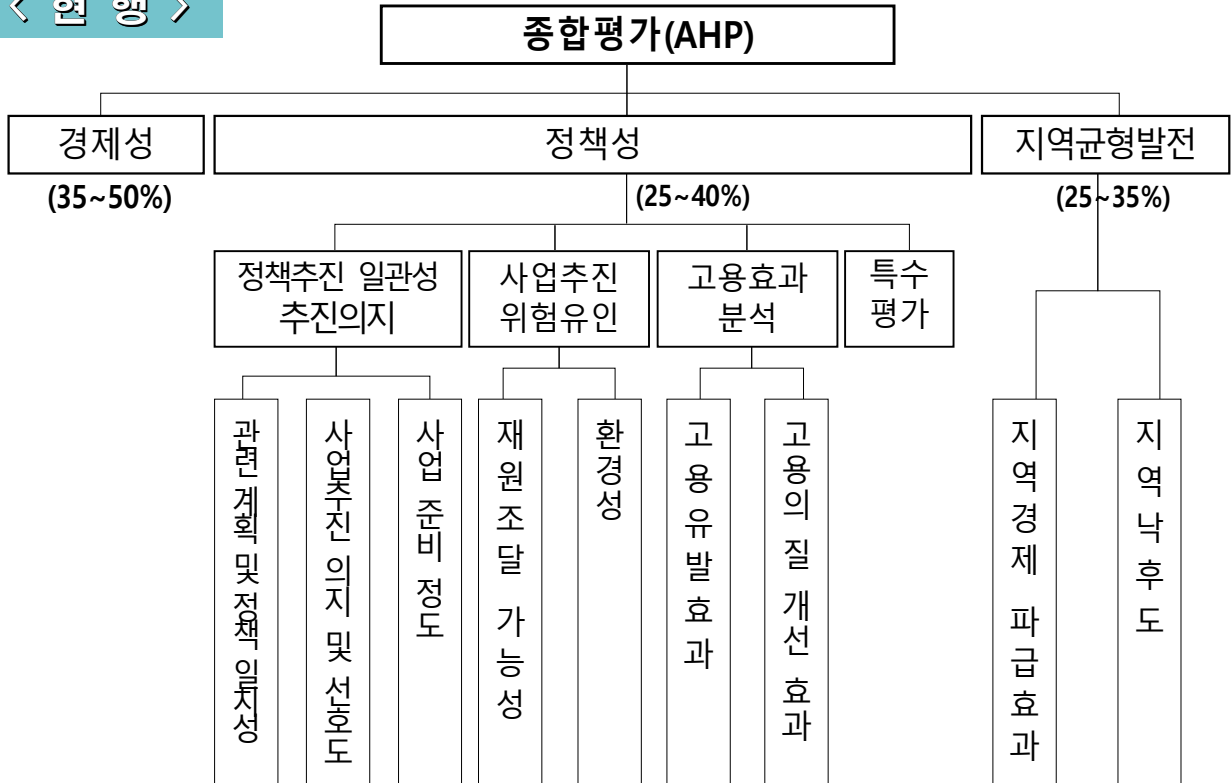
구분	'09	'10	'11	'12	'13	'14	'15	'16	'17	'18
조사기간	7.8	8.3	9.4	9.4	12.3	12.3	14.8	15.8	21.3	19.0
사업수	72	77	61	48	29	44	34	39	40	27

□ (개선방안) 철회·재요구 요건 완화, 사전준비 철저 및 진행상황 점검

-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, 철회·반려 적극 허용, 예타 재요구 요건 완화
- 예타 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절차 강화하여 자료 요청·제출 시기를 단축
- 기재부, 조사기관, 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점검단 운영

# 참고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체계 개편(안)

## < 현행 >



## < 개편 >

